

한·미·일 삼국협력의 변화 - 국가의 기억과 협력의 제도화를 중심으로

천자현 ■ 연세대학교*

〈국문요약〉

미국의 바이든 신(新)행정부는 미중 전략경쟁과 책임 있는 패권국가의 지위를 회복하기 위한 외교 전략으로써 한·미·일 삼각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최근 몇 년 악화일로를 견고 있는 한일관계를 고려했을 때, 원활한 삼각협력 관계 구축을 위한 한일관계의 회복이 미국 신행정부의 주요 외교정책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논문은 한미 동맹이 한·미·일 삼각협력의 하부구조로 작동하는 것이 아닌, 공간적·질적으로 발전하여 독자적으로 중요한 양자동맹이 되었다는 관점에서 한·미·일 삼각협력의 변화 양상을 분석할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기존의 연구들이 한·미·일 삼각협력을 어떻게 분석하고 다루었는지 검토할 것이다. 한·미·일 삼각협력의 제도화가 어려운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한일 간 과거사 문제로, 국가의 집단기억이 외교정책에 미치는 영향과 미국 관여의 한계를 분석하여 이들 문제가 여전히 현재진행형인 이유를 입증할 것이다. 이를 통해 한미일 삼각협력이 단기간에 제도화되기 어려운 이유를 분석하고, 이를 근거로 병렬적 협력 모델을 대안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주제어: 한미일 삼각협력, 집단기억, 외교정책, 제3자 중재, 과거사

I. 서 론

미국의 바이든(Biden) 신(新)행정부는 트럼프(Trump) 전(前) 대통령 임기 동안 약화된 동맹국과의 연대를 재정비하고 책임 있는 패권국가의 지위를 회복하기 위해 외교적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특히 한미일 삼각협력의 중요성과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공개적으로 피력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가 한국과 일

*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국제관계학과 부교수 (E-mail: jhreine@yonsei.ac.kr)

본과의 관계를 회복하는데 진력하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를 보내기 위해 한미일 외교당국자 회의를 개최하기도 하였다(Lee 2021). 이는 한국, 일본과의 양자 동맹 강화 노력과 함께 한미일 삼각협력의 재구축에 집중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한미 외교·국방장관 2+2 회의와 미일 정상회담, 한미 정상회담에서 공통적으로 한미일 삼각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한미 2+2 공동 성명에서는 “한미일 삼각협력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역내 평화, 안보, 그리고 번영을 증진하기 위해 상호 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협력”에 대한 내용을 담았으며, 미일 2+2회의 공동성명에도 “인도-태평양 지역의 공동안보, 평화, 번영을 위해서 미국, 일본, 한국 간의 3국 협력이 중대한(critical)” 부분임을 확인하였다. 미중 전략경쟁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한국과 일본이 아시아의 주요 동맹국으로서 제 역할을 해주는 것은 미국의 이익과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은 삼각협력이 대북정책과 인도-태평양 정책 등 아시아 지역에서의 정책 수행 및 미국의 국익에 핵심적인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트럼프-아베 재임 시기 동안 악화된 한일관계로 인해 삼각협력이 저해되었다는 문제인식을 갖고 있다(CRS 2020).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수 십 년 이래 최악으로 치닫고 있음을 고려했을 때, 한일관계의 회복은 미국 실행정부의 주요 외교정책 과제로 부각될 수밖에 없다. 즉, 악화된 한일관계의 개선 여부가 국제사회에서의 신뢰 회복과 함께 미중 전략경쟁에서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주요 이슈로 자리 잡게 된 것이다.

이에 본 논문은 한미 동맹이 과거와 같이 한미일 삼각협력의 하부구조로 작동하는 것이 아닌, 공간적·질적으로 발전하여 독자적으로 중요한 양자동맹이 되었다는 관점에서 한미일 삼각협력의 변화 양상을 분석할 것이다. 이를 위해 기존의 연구들이 한·미·일 삼각협력을 어떻게 분석하고 다루었는지 검토하고, 이들 연구의 기여와 한계를 토대로 새로운 형태의 한미일 협력의 분석틀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유사동맹’(quasi alliance) 모델 그 이후

한미일 삼각협력을 구조적·이론적으로 설명한 대표적 모델은 빅터 차(Victor Cha)의 ‘유사동맹(quasi alliance)’ 모델이다. 이는 동맹의 개념을 차용하여 분석한 것으로, 동맹 관계에 있어 방기(abandonment)와 연루(engagement)를¹⁾ 활용

하여 한미일 삼국 관계를 설득력 있게 설명하였다. 한국은 한미동맹에서 미국으로부터 방기되는 것에 두려움을 갖고 있으며, 일본은 미일동맹에 의해 한반도 갈등에 위기에 되는 것에 대해 두려움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한일 관계를 한미일 삼각관계의 틀 안에서 분석하고 있는데, 미국이 강하게 개입할수록 한일 간 갈등은 커지고, 역으로 미국의 개입이 축소되면 한일 관계가 우호적으로 변화하며 연대의 필요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Cha 1999; Cha 2000, 261-269). 이러한 구조적 설명은 한미일 삼국이 서로 특정한 위계질서를 갖고 있으며, 그 속에서 공동의 안보 위협 요인에 대해 역할 분담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해석과 맥락을 같이 한다(박선원 2001, 315). 즉, 미국의 정책이 일본과 한국의 행위를, 그리고 일본의 정책이 한국의 행위를 규정하는 등 국제정치에서의 위계성에 따라 국가의 행위가 결정된다는 것이다(신유희 2019, 3).

이후 한미일 삼각협력을 분석한 논문들은 미국의 아시아 정책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국제정치 구조와 '유사동맹' 모델의 설득력을 수용하면서도, 조금씩 다른 접근으로 한일관계와 한미일 관계를 분석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신유희(2019)는 '주체-구조 문제'와 함께 '복합성'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는데, 이는 구조 속에서 영향을 받는 단순한 행위자를 넘어 적응적 주체의 상대적 자율성이 작동하는 복합성을 고려함으로써 한일관계의 역동성을 보다 잘 설명하고 있다. 또한, "한미일 관계의 위계적이고 비대칭적인 구조"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상호작용을 밝혀내기 위한 체계이론적 접근을 활용한 연구도 찾아 볼 수 있다(박선원 2001). 이는 한미일을 하나의 독립된 하부단위로 기능하는 체계로 간주하고 삼국간의 상호작용을 분석한 시도로, 포괄적인 정치 협약에 근거한 동북아 삼각동맹안보체계(Triangular Alliance Security System, TASS)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2개의 공식적인 안보 조약과 1개의 암묵적 또는 비공식 방위협력조약으로 이루어진 삼각동맹안보체계라는 것이 저자의 주장이다(박선원 2001, 319-320).

한편, '유사동맹' 모델이 설명하지 못하는 미국 개입시의 협력적 한일관계를 이해하기 위한 접근으로는 '개입-연합정치가설(engagement-coalition politics

1) Glenn H. Snyder는 방기는 일반적으로 배반(defection)을 의미하며, 다양한 형태들-적대국과의 제휴, 탈제휴, 동맹공약 이행 실패 등-로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한다. 한편, 연루는 공유하지 않거나, 혹은 부분적으로 공유하는 동맹국의 이익과 관련된 갈등에 개입되는 것으로 설명하며, 교전비용보다 동맹 보존의 가치가 더 높다고 평가할 때 발생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 둘은 상관관계가 갖는데, 방기와 연루의 위험성은 반비례하는 경향이 있으며 하나의 위험성을 줄이면 반대로 다른 하나의 위험성이 증가된다고 분석하고 있다(Glenn H. Snyder. 1997. *Alliance Politics*. Ithaca and London: Cornell University Press, 466-467).

hypothesis)이 있다. 이 가설은 국내정치와 국제정치의 연계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양국 협력 증감이 미국의 영향력과 함께 한국과 일본 내의 지배연합의 변화라는 변수를 함께 분석할 것을 주장한다(우승지 2003). 다시 말해, 수직적 연계와 수평적 연계를 함께 고찰함으로써 한일관계의 역동성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이처럼 기존 연구들은 '유사동맹'의 유용성과 한계를 분석해왔고, 한미일 삼각관계에 대한 설득력 있는 가설들을 제공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연구는 시기적으로 냉전기 한미일 삼각협력과 한일관계에 초점을 맞춰 분석해왔다는 한계를 갖는다. 빅터 차의 '유사동맹' 모델이 발표된 지 20년이 넘는 지금, 현재의 한미일 삼각협력 양상과 그 구조 속에서의 한일관계에는 많은 변화가 관찰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본 논문은 '유사동맹' 모델이 탈냉전 이후 한미일 관계와 한일관계를 설명함에 있어 몇 가지 주요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한미동맹을 설명함에 있어 방기의 두려움에 관한 주장이다. 아시아 지역과 한일관계에 대한 미국의 역할 혹은 관여가 축소되었던 지난 4년간의 트럼프 행정부 기간을 고려했을 때, 방기와 연루에 대한 두려움의 논리는 크게 적용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주한미군 철수, 방위비 분담 증대에 대한 압박 등 동맹 중시 전략이 약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방기에 대한 두려움으로 반응하지 않았다. 오히려 국내적으로 자주론의 목소리가 커지며 전작권 환수와 주한미군 철수 등의 급격한 변화에 대비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관심을 받기도 하였다.

둘째, 방기의 두려움이 한일 협력으로 연결될 것이라는 주장이다(Cha 1999, 213). 전술한 바와 같이 트럼프 행정부 기간 한미동맹의 약화가 한국 외교정책에 방기의 두려움을 초래하지 않았으며, 두려움이 없었기에 한일 간 협력적 관계로 이어지지도 않았음은 더욱 분명한 사실이다. 오히려 그 기간 동안 한일 관계는 역사 갈등에서 시작하여 정치, 외교뿐만 아니라 무역관계까지 영향을 미쳐 지속적으로 경색되어왔다. 이는 방기의 두려움이라는 전제가 허용되지 않았기에 그 결과 역시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셋째, 한일 역사 갈등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완화될 것이라는 예측이다. 빅터 차는 저서에서 한일 역사 갈등 그 자체를 본격적으로 다루지는 않지만, 향후 동북아시아 지역의 정치적 지형을 예측하면서, 젊은 세대들이 등장하면서 한일 간 역사 갈등 역시 차츰 나아질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그러나 현재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현실은 이 예측이 완전히 빗나갔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다. 최근의 무역 갈등에서 비롯된 한국 내 일본 제품 보이콧(boycott)은 오히려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더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본 논문은 한미일 삼각협력이 국제정치 구조와 위계에 따른 역할 배분과 정체성 부여를 넘어 새로운 형태의 협력 모델로 조정되어 가고 있다고 본다. 3장에서는 한미일 삼각협력의 당장 제도화되기 어려운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국가의 집단기억이 외교정책에 미치는 영향과 한일 역사 갈등 해결을 위한 미국 개입의 한계를 분석할 것이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4장에서는 한-미, 미-일 두 동맹의 병렬적 협력 모델을 대안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III. 한일 역사 갈등의 현재화

당분간 한미일 삼국협력이 제도화된 삼각 협력의 형태로 발전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분석하는 이유는 한일관계라는 삼각관계의 한 변(邊) 때문이다. 세 꼭짓점과 세 변으로 이루어지는 삼각형의 형태에서 한국과 일본이라는 두 꼭짓점이 이루는 변은 지난 80여 년 동안 불안정한 특수 관계에 있었다. 한편으로는 경제적 협력, 인적 교류 등이 활발한 가까운 이웃이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과거사 문제를 사이에 둔 먼 이웃이기도 했다. 2017년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이후, 화이트 리스트 배제와 같은 일본의 무역 보복, 초계기 위협 비행 등으로 양국 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좋지 않은 상황이다(미국의회조사국 2021.2.10.). 미국 역시 아베 총리 재임기 동안 두 동맹국의 관계가 악화되어 한미일 삼각협력이 저해되었다고 평가하고 있다(미국의회조사국 2020.9.24.). 그렇다면 한일 간 역사 갈등은 왜 여전히 현재 진행형인가? 본 논문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국가적 집단기억이 외교정책에 미치는 영향과 미국 관여의 한계를 제시하고자 한다.

1. 외교정책과 국가의 집단기억

국가의 집단기억(collective memory), 그 중에서도 트라우마(trauma)로 남아있는 역사적 사건의 경우 여론 형성에 영향을 주고, 나아가 외교정책 결정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²⁾ 한국의 경우 일본 식민지배 역사와 이 과정에서 발생한 강

2) 내셔널 트라우마(national trauma)와 여론, 외교정책의 관계에 대한 분석은 비교적 최근 국제정치 분야에서 연구되고 있다. 주로 국제정치에서 집단기억과 국가적 트라우마

제징용, 위안부 등 반인륜적 범죄 행위가 국가적 트라우마로 깊게 자리하고 있다(Chun 2021). 게다가 이에 대해 충분히 사죄하고 보상했다는 일본의 입장과 그렇지 않다는 한국의 입장이 충돌함으로써, 언제든 한일관계를 경색시킬 수 있는 위협요인이 되고 있다. 양국 간 활발한 인적·물적 교류와 협력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늘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은 불안함이 존재하는 데에는 과거의 상흔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이다.

국가적 트라우마가 발현된 대표적인 사례가 한일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 GSOMIA) 과 관련한 일련의 논란이다. 2016년 협정 체결 당시, 야당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 위원회의에서 “군사적으로 일본과 손잡겠다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협정 체결은 국민 정서에 기름을 붓는 셈이다. 국방부는 국민을 분노하게 할 협정 추진을 중단하지 않으면, 야권 공조를 통해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덧붙여 “일본과 직접적인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하는 건 일본 군국주의 망령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라고 비판하며 과거 아픈 역사의 반복을 기억하자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하였다.

협정 체결 3년 후인 2019년, 한국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해 일본이 화이트 리스트 제외라는 부당한 보복조치로 대응하자, 이에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고 종료하기로 결정함으로써 한일관계는 물론 한미일 삼각협력도 타격을 받게 되었다. 한국의 지소미아 반대론자들은 한국이 입수하는 대북 정보가 더 많기 때문에 일방적 혹은 비대칭적 정보 교환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또한, 대중국 견제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의 외교 반경이 위축될 수 있으며, 동아시아의 지역질서가 냉전기로 회귀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부정할 수 없다는 것이 반대론자들의 논리이다. 한미일 삼국과 중국의 안보딜레마(security dilemma)를 심화시켜 지역 안보를 더욱 불안정하게 한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일본이 협정 체결을 계기로 북한의 급변사태 등 한반도에 대한 적극적이고 명백한 개입 정당성을 갖게 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우려하고 있다. 일본에 대한 부정적 집단 기억이 여전히 지배적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이는 한국 정서상 받아들이기 힘든 정책적 선택인 것이다.

가 안보 정책을 결정함에 있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Jenny Edkins. 2002. 'Forget Trauma? Responses to September 11' *International Relations* 16(2), 243-256; Duncan Bell(ed.), *Memory, Trauma and World Politics: Reflection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ast and Present*(New York: Palgrave, 2006); Erica. Resende and Dovile. Budryte(eds), *Memory and Trauma in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ies, Cases and Debates*(London: Routledge, 2013).

2014-2015년에 있었던 일본의 안보법제 추진 및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과 관련한 논란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박철희 외 2016). 당시 한국의 시민단체들은 “일본 재무장 반대와 동북아 평화를 위한 시국선언”을 발표 하였다. 이들 선언문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도입은 과거사를 제대로 청산하지 않은 일본에게 군사대국화 가능성을 열어주는 것으로,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결정이라고 주장하였다. 집단적 자위권 도입을 과거의 침략전쟁 기억과 연결시킴으로써 ‘일본이 과거에 아시아주의를 거쳐 대동아공영권이라는 논리로 대륙 침략과 식민지 지배를 정당화했듯이, 미중 간의 패권 싸움 속에서 결국 일본이 보통국가, 군사대국화가 될 것’이라는 논리로 귀결되는 것이다(박철희 2019, 134-135).

한편, 한일 간 방위협력 및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대한 한국인들의 위협 인식과 부정적 의견은 여론조사를 통해 잘 드러나고 있다. 한국인의 72%는 “일본은 우리의 동맹국이 아니다”라고 응답했고, 75.5%는 “일본 군사력이 아시아의 평화를 깨뜨리기 때문에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반대한다”고 응답하였다(허중준 2013). 한국일보와 요미우리신문이 공동 조사한 결과에서도 절반 이상의 응답자가 “한일 방위 협력 강화가 필요 없다”고 응답했다. 북한 정세를 근거로 일본이 방위력을 강화하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한 질문에도 한국인의 68.2%가 “타당하지 않다”고 답했다. 반복 정서를 가진 한국의 보수 성향 응답자들도 절반 이상이 일본의 방위력 강화에 반대했다는 점을 눈여겨볼 만하다(한국일보 2017.6.12.) 군사정보보호협정 등 한일 군사협력 추진에 대한 질문에서 한국 국민의 59%는 “과거사 반성 없는 일본과 군사적으로 협력을 강화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보였다(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 제236호, 2016). 야스쿠니 신사 참배, 강제 징용, 위안부 문제 등의 과거사 문제는 한일 군사협력 및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와 직접적 관련 이슈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사에서 비롯되는 집단 기억과 트라우마는 양국 간 안보 및 군사 협력의 영역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제3국 개입의 한계

미국은 1965년 한일국교정상화를 포함하여 2015년 위안부 합의에 이르기까지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관여를 지속해왔다. 그러나 역사문제에서 기인한 한일 간 불화를 완화시키기에 미국이라는 외부 변수이자 제3국의 역할이 그 한계에 직면한 것 역시 사실이다. 첫 번째 원인은 중개자(mediator)로서의 미국의 중립성 문

제이다. 중개(mediation)는 가장 많이 사용되고 가장 오래된 제3자(third-party) 개입의 하나로, 제3국이 당사국들의 타협을 유도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방법을 직접 제안하는 등 협상을 적극적으로 돕는 방식이다. 중개는 첨예한 정치적 갈등 해소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도 하다. 중개자의 역할이 원활히 작동하기 위해 가장 전제되어야 하는 조건은 중립성이다(Bercovitch and Richard Jackson 2001; Bercovitch 1996, 11-38; 천자현 2016, 155). 두 갈등 당사국은 중개국이 어느 한 쪽에 치우치지 않는 중립적 관점에서 협상에 관여할 때 불이익의 두려움 없이 신뢰를 바탕으로 협상에 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일 갈등에 대해 한국과 미국의 관점이 일치하지 않으며, 미국이 일견 일본에 경사되어 있다는 것이 한국의 입장이다. 일본은 센카쿠 및 인근 동중국 해역에서의 중국과의 군사적 접촉을 대비하여 방위태세 강화를 위한 집단적 자위권 도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미일동맹의 기틀 안에서 국제안보에 적극적으로 공헌할 수 있는 ‘적극적 평화주의’를 표방함으로써 미국 안보 정책에 대한 지원을 표면화하고 있다. 이러한 일본의 움직임은 미중 전략경쟁 구도 하에서 아시아 지역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에 미국의 입장에서는 적극 지지할만한 내용이다. 하지만 또다른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의 입장은 다르다. 일본의 자위권 행사, 평화헌법 개정 등 일련의 움직임을 군국주의의 부활의 포석으로 간주하여 강한 반대 여론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이 2021년 2월 발간한 ‘2020 국방백서’에서 “일본은 양국 관계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도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할 이웃 국가”라고 기술함으로써 이전에 쓰였던 ‘동반자’라는 표현을 삭제한 것도 불만의 우회적인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다(국방부 2021, 173). 한미일 삼각협력을 구상하는 미국의 입장에서 한국의 이러한 반대 목소리는 정책 조율에 불협화음을 초래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는 것이다.³⁾ 즉, 일본의 재무장화라는 안보 정책을 바라보는 한국과 미국의 관점과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한일갈등 해결에 있어 미국에 중립적인 중개자의 역할을 기대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두 번째 원인은 대북정책에서 발생하는 한미 간 의견 차이이다. 미국 의회조사국이 발간한 보고서는 몇 년 동안 북한 핵 협상과 관련하여 유사한 평가를 내리고 있다. “몇 년 간, 특히 북한 문제와 관련해 밀접히 공조해왔던 두 나라의 협력이 트럼프와 문재인 행정부 아래서 더욱 일관성 없고 예측할 수 없게 됐다”

3) 에번스 리비어(Evans Revere)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부차관보는 자유아시아방송(RFA)에서 이에 대해, “북한을 주적이라고 정확히 말하지 못한 국방백서가 일본을 단지 이웃 국가로만 기술한 것은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고 지적하였다(미국의회조사국 2019, 8.1). 2021년 2월 보고서 역시 “문 대통령이 미국과 긴장을 유발할 수 있는 대북 제재 완화를 선호하기 때문에 대북정책에 대한 양자 조율의 어려움이 표면화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미국의회조사국 2021.2). 북한에 타협을 해야 하는지, 한다면 어떤 조건하에서 해야 하는지에 대해 미국과 한국 사이의 이견이 여전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한국이 미국보다 북한에 더 이른 시점에, 더 많은 경제적 혜택을 주는 것을 선호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하였다(미국의회조사국 2019). 미일관계 보고서에도 “북한의 위협이 그동안 한미일 협력을 강화하는 역할을 했지만 최근 대북정책에 대한 이견과 북한의 도발 유예로 삼국 공조가 약화되었다”는 유사한 분석이 눈에 띈다. “한일 양국의 정치적 긴장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위협은 전통적으로 한미일 3국의 긴밀한 공조를 견인해왔다...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했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개인적 외교에 집중한 반면 일본은 대북 강경 기조를 유지했다...이런 가운데 북한이 핵과 장거리 미사일 시험 유예를 지속하는 상황은 한미일 3국 간 조율된 행동과 발언 기회를 줄였다”고 분석하고 있다(미국의회조사국 2021.4.6).

한국의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취임사에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가야만 하는 길”이라고 밝히며, 바이든 행정부를 향해 대북 조기 관여와 제재완화를 직간접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입장과 관련하여, 아미 베라(Anni Bera) 하원 외교위원회 아시아-태평양 소위원회장은 “현재 상황에서 북한에 어떤 양보도 해선 안 된다”고 단호하게 반응했다. 특히, ‘대북전단 살포금지법’의 경우 “(미 의회)는 적절한 시점이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한국 국회와 문재인 정부는 법안 처리를 강행했다...더 큰 규모의 대북협상의 일부가 되었어야 하는데, 북한에 무언가를 주고 아무것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서 안 된다”고 비판했다(미국의 소리 방송 인터뷰 2021.2.8).

한국의 대북정책에 대한 미국의 불만족은 미 정부 매체를 통한 전직 관리들의 비판적 견해들을 통해 보다 높은 수위로 표현되고 있다. 최근 방송한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비판 기사들의 제목을 보면, 다음과 같다.

“문재인 ‘김정은 비핵화 의지’...바이든 ‘설득’ 말아야 (미국의 소리방송 2021.2.9)

“미, 한국에 ‘선분류 대북양보 주의’ 권고해야” (자유아시아방송 2021.2.25.)

“미국과 한국 ‘대북인식’단절 위헌...조율해야” (미국의 소리방송 2021.2.20.)

“미 국무부 ‘한국 통일장관 발언 논란’에 지독한 북한인권 주시할 것” (미국의 소리방송 2021.2.23.)

“미 국무부, 한국 통일장관 ‘대북제재 우려’에 주민 어렵게 만든 건 북한 정책”
(미국의 소리방송 2021.3.1.)
“미 전문가들, 한국 통일장관, 제재 아닌 김정은 실정 비판해야...북한 ‘자체 제재’
가 민생 파괴” (미국의 소리방송 2021.3.2.)

‘미국의 소리(VOA, Voice of America)’는 미국 정부 국영 국제방송이며, ‘자유아시아방송(RFA, Radio Free Asia)’는 미국의회의 출자에 따라 세워진 국제방송이다. 이들 방송의 본질을 고려했을 때, 대북정책을 비판하는 일련의 흐름에 대해 개인의 의견으로 평가절하하기에는 무리가 있음이 분명하다. 미국과 엇박자를 내는 혹은 사전에 협의되지 않은 한국의 대북정책들에 대한 우회적인 비판으로 이해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분석일 것이다. 이처럼 한국과 미국의 대북정책 목표가 다른 상황에서는 정책 조율이 쉽지 않다. 자연스럽게 한일 갈등에 대한 미국의 관여 역시 중립적이고 공정한 중개가 아닌, 편파적인 편들기로 인식될 가능성이 높아 관계 개선의 가능성이 낮아지게 되는 것이다.

IV. 한-미, 미-일 동맹의 ‘병렬적 협력’ 모델

기존 연구들이 한국, 미국, 일본의 협력을 삼각 구도 혹은 삼각 유사동맹으로 분석해왔다면, 본 논문은 탈냉전 이후 이들 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대안적 분석틀로써 두 동맹의 ‘병렬적 협력’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삼각 협력 속에서 한-미, 미-일이라는 두 변(邊)은 견고한 동맹 관계를 유지해왔으며, 미중 전략 경쟁의 격화 속에서 그 중요성과 필요성이 더욱 증대되는 상황이다. 그러나 한-일이라는 변이 삼각동맹 혹은 삼각협력체제를 이를 정도의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인 한일 갈등이 해결되어야 함은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당장 군사 협력을 본격화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많고, 한미일 삼국 협력의 관점에서도 MD체제에 편입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대안적 구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이러한 대안 모델은 탈냉전기 한미동맹의 질적 발전에 따른 정체성 변화와 미일동맹의 견고함을 반영하는 형태여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 냉전기 국제체제의 구조와 위계성에 따른 역할분담에서 벗어나 대등한 형태의 두 동맹이 병렬적으로 연대할 수 있는 조건과 환경이 충족되었다고 분석할 수 있다.

1. 한미동맹의 전략적 발전

최근 한미동맹은 지리적, 영역적 차원에서 협력의 범위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협력의 지리적 확장은 한미동맹이 양자 관계를 넘어 지역 수준으로 확장, 나아가 글로벌 파트너 관계로의 진화를 의미한다. 한미정상회담에서 한반도를 벗어나 미국의 인도-태평양 구상과 한국의 신남방정책의 결합을 모색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한미정상회담 2021). 한편, 영역의 확장은 가치와 규범, 경제, 보건, 사이버 및 우주 안보에 이르기까지 동맹의 협력 범위가 확대되었음을 의미한다. 특히, 보건 협력 영역은 미국의 원부자재 공급과 한국의 바이오 생산역량을 결합하게 됨으로써 한국이 백신 공급 허브 역할을 담당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변화들을 통해 기존에 '군사 동맹', '후원-피후견인(patron-client)' 관계, '안보-자주 교환 동맹(security-autonomy trade-off)' 등 비대칭 동맹으로 설명되었던 한미동맹이 한국의 국력 성장과 상호 인식의 변화로 인해 이전보다 균등한(equivalent) 관계로 발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⁴⁾

이와 같은 한미관계의 발전은 미국의 전략적·인식적 변화에 바탕하고 있다. 미중 전략경쟁이 치열하게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에게는 그 어느 때보다 동맹국의 지지와 지원이 중요해지고 있다. 2021년 3월 17일 토니 블링컨(Antony J. Blinken) 미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Lloyd Austin) 미 국방장관이 한국을 방문하여 한미 외교·국방(2+2) 장관 회의를 개최한 것이 이를 방증한다. 2016년 이후 5년만에 재개된 '한미 2+2회의'는 높은 협력 수준을 상징하는 것으로 한국은 미국 및 호주와 2+2회의를 개최하고 있고, 미국은 한국 외에 호주, 일본, 인도 등 소수의 핵심동맹국 및 파트너국과 2+2회의를 개최하고 있다(김도희 2021).

한편, 한미 양국간 상징적이지자 실질적인 협력과 신뢰의 강화를 보여주는 것이 미사일 지침 종료이다.⁵⁾ 1979년 '한미 양국 간 체결된 탄도미사일 개발 규제에 대한 지침' 체결 이후, 미사일 개발 역량에 제한이 있었으나 2017년 미사일 탄두중량 제한 해제, 2020년 고체연료 제한 해제 등 4차례 개정을 통해 완화되어왔다. 이어 2021년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미사일 개발에 관한 모든 제한의 해제가

4) 이는 국력 관점에서의 비대칭을 부정하는 것이 아닌, 협력 역할 분담에서 균등한 관계로 발전해나가고 있음을 의미한다. 힘의 차이는 있으나 크기에 따라 역할을 나누어 가진다는 균등성으로 '평등한(equal)' 관계와는 의미가 다르다(김기정 2021, 6).

5) 미사일 지침은 1979년 9월, 사거리 180km, 탄두중량 500kg이라는 한국의 자율적 선언에 의해 만들어진 뒤, 사거리 제한 300km(2001년 1월), 사거리 제한 800km(2012년 10월), 탄두중량 제한 없앴(2017년 9월), 우주발사체에 고체연료 로켓 허용(2020년 7월)에 이르기까지 4차례 개정되었다.

결정됨으로써 미사일 주권을 회복하게 된 것이다. 한국의 입장에서는 지속적인 자주국방론 추구의 결과물인 한편, 미국의 입장에서는 한국을 신뢰할 수 있는 안보 협력 파트너로 인식하고 있다는 의미로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미중 전략경쟁 상황에서 사거리 제한 해제는 북한을 넘어선 위협, 즉 중국의 위협에 대한 견제라는 일각의 해석도 있다. 하지만 과거 사드 배치 이후 한국에 대한 중국의 경제 보복과 같은 후폭풍을 방지하기 위해, 한국 자체 능력을 강화하는 방향을 선택한 것이라는 분석이 보다 타당해 보인다. 연속선상에서 “민간 우주 탐사, 과학, 항공 등 연구 분야에서 파트너십을 강화하기로 약속하고 ‘아르테미스 협정(Artemis Accords)’⁶⁾에 공식 서명하였다.

전술한 바와 같이, 한미동맹은 지리적 확장과 영역의 확대를 시도하며 이전보다 전략적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미국이 과거에는 한미동맹을 한미일 삼각협력 관계의 하부 구조로 인식하는 측면이 컸다면, 최근에는 독자적인 양자관계의 틀에 힘을 실어주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이는 견고한 미일동맹과 함께 두 개의 동맹이 병렬적 형태로 연대 및 협력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주는 계기이기도 하다.

2. 미일동맹과 인도-태평양 전략 중요성의 지속

일본은 미국의 대중전략 및 코로나 19 이후 세계질서 구축의 최전선에 함께 할 확고한 파트너로 자리잡아 왔다. 바이든 행정부에게는 장기전이 되어가고 있는 미중 경쟁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 동맹국이 바로 동일한 목표를 공유하고 있는 일본인 것이다. 2021년 3월 블링컨(Antony Blinken) 국무장관의 방일을 앞두고 미 국무부는 “깨질 수 없는 미일 동맹의 재확인(Reaffirming the Unbreakable U.S.-Japan Alliance)”을 통해 미일 동맹을 “60년 이상 인도 태평양과 전세계에서 평화, 안보, 번영의 초석(cornerstone)역할을 해왔다”고 언급하였다(Department of State 2021). 또한, 2021년 3월 16일에 개최되었던 미일 안보협의위원회(United States-Japan Security Consultative Committee, 이하 미일 2+2 회의) 공

6) 아르테미스 협정(Artemis Accords)는 미국 중심의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에 협력하는 국가들의 협력 원칙에 대한 약속으로 평화적 목적의 탐사, 투명한 임무 운영, 탐사시스템 간 상호운영성, 비상상황시 지원, 우주물체 등록, 우주탐사시 확보한 과학 데이터의 공개, 아폴로 달 착륙지 등 역사적 유산 보호, 우주자원 활용에 대한 기본원칙, 우주활동 분쟁 방지, 우주 잔해물 경감 조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2021년 기준으로 미국, 영국, 일본, 이탈리아, 호주, 캐나다, 룩셈부르크, 아랍에미리트(UAE), 우크라이나, 그리고 한국이 합류한 상태이다(동아시아연구소 2021.5.31).

동성명에서 양국 장관은 미일 동맹이 “인도 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보, 번영의 초석으로 남아 있음을 재확인”하고 있음을 발표하였다(Department of State 2021). 일본의 대미 동맹정책도 이에 호응하고 있다. 2020년 일본 외교청서는 일본 외교의 6대 중점 분야 중 “미일동맹 강화”를 가장 첫 머리에 적고 있다(外務省 2020). “지역의 안보 환경이 어려운 가운데 미일동맹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기술하고 있다. “북한 문제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제 과제 및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Free and Open Indo-Pacific: FOIP)’의 유지 강화를 위해 미일은 협력하고 있으며, 미일방위협력지침 개정 및 평화안전법제 정비를 통해 미일동맹의 억제적 대처능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김도희, 박명희, 정민정 2021, 3). 일본 외교안보의 기축인 미일동맹은 전후 일본에게 한결같은 최우선 정책인 것이다.

미일동맹은 군사적·경제적 측면에서 그 결속력을 공고히 하고 있다. 우선, 미일동맹의 군사 전략은 인도·태평양 전략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2019년 6월, 미국방부의 “인도 태평양 전략보고서(Indo-Pacific Strategy Report)”에 따르면 “미국은 인도·태평양 전략 실행을 위해 지역 내 상호운용성과 조정을 제고하기 위해 동맹국 및 파트너십 국가들과의 네트워크 구축에 중점”을 두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소다자 네트워크 구축의 대표적인 예로 한미일 삼자협력과, 미일호 삼자협력, 미일인 삼자 협력, 그리고 미일인호 4자 안보 대화인 쿼드(Quad, Quadrilateral Security Dialogue) 등을 들 수 있는데, 일본은 이 네트워크 모두에 핵심 파트너로 참여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미국은 미일 동맹을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의 초석’으로 평가하며,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고, 러시아·중국과의 경쟁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 동맹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2021년 개최된 미일 2+2 회의에서 양국 장관들은 다양한 분야에서 중국 견제에 힘을 싣고 있다. 기존 국제질서에 부합하지 않는 중국의 행동이 미일 동맹 및 국제사회에 정치적·경제적·기술적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는 양국 공통의 인식을 확인하였으며, 중국 해경법에 관한 우려 및 남중국해에서의 중국의 불법적인 활동에 대한 반대를 표명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은 일본에 중요하고도 민감한 주제인 센카쿠 제도에 대해 미일안보조약 제5조의 적용을 확약(commitment)한다고 표명함으로써,⁷⁾ 일본의 기대와 요청에 부응한 것으로 보인다. 2021년 4월

7) 센카쿠에 대한 미일안보조약 제5조의 적용은 2014년 오바마 대통령 시기 처음으로 언급된 것으로, 미일안보조약 제5조는 ‘일본의 시정 하에 있는 영역에서 미일 중, 일방에 대한 무력공격에 대해서 공동으로 대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김도희, 박명희, 정민정 2021).

16일 발표된 미일 정상회담 공동성명 역시 “경제적 및 다른 형태의 강압(coercion) 행사를 포함해 규범에 입각한 국제질서와 합치하지 않은 중국의 행동에 대한 우려”를 명시함으로써 센카쿠 열도와 타이완에 대한 중국의 군사행동을 강력히 견제하고 있다. 또한 기시 노부오(岸信夫) 방위상은 “동맹 및 지역의 안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일본의 방위력을 강화하겠다”는 결의를 표명함으로써 일본의 방위력 강화가 대중국 억제력으로 기능할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日本經濟新聞 2021.5.20; 조진구 2021).

미일동맹을 주축으로 한, 경제 분야의 대중국 견제도 본격화 추세에 있다. 미국은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견제하기 위해 동맹국과의 연대 강화를 강조하고 있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미일 무역협정과 미일 디지털 무역협정을 통해 일본과의 통상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중국에 대한 공동 압박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미일 디지털 무역협정은 미국이 주도적으로 수립하고자 하는 디지털 통상규범의 표준을 내세우고 있어, 경제 분야에서도 중국 견제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김도희, 박명희, 정민정 2021, 5). 2020년 11월, 중국 주도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서명 이후, 바이든 대통령(당시 당선자)은 미국이 주도적으로 통상규범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던 것으로 미루어 봤을 때, 앞으로 일본을 위시한 동맹국들과의 경제 협력 및 대중국 견제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Inside U.S. Trade 2020.11.7).

V. 결 론

바이든 정부의 등장으로 미국 외교정책에 있어 보다 긴밀한 한미일 삼각협력이 요구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한일관계 역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미국이 두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이 북한 문제와 지역 현안들에 대해 공조할 수 있도록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을 쏟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3국 관여라는 외부 변수가 한일 간 해묵은 과거사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인다. 특히, 미국이 기대하는 두 동맹국 간 안보 및 국방 협력은 더욱 쉽지 않은 과제이다. 2016년 7월 사드(THAAD) 배치 이후 중국의 ‘3불(不) 정책’⁸⁾

8) ‘3불(不) 정책’은 사드 추가배치 검토 없으며,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MD)에 참여하지 않고, 한미일 삼국간 안보협력이 군사동맹으로 발전하지 않을 것이라는 정책으로, 중국은 이를 ‘3불(不)약속’으로 이름 붙인 바 있다.

요청으로 인해 한국 정부로서는 군사협력의 제도화에 있어 더욱 조심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안보 및 국방 협력은 한일관계가 다시 정상 궤도에 오른 후 한미일 삼각협력 구도 속에서 그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보인다.

게다가 한일 간 역사 갈등은 양국의 외교, 사법, 정치의 영역을 지배하며 현재 진행의 양상을 띠고 있다. 2021년의 한일 역사 갈등은 보편적 인권의 문제이고, 양국의 외교 문제이기도 하며, 한국의 사법 문제이자 일본의 정치 문제이기도 하다. 이처럼 복잡한 쟁점이 얽혀 있는 상황에서 가까운 미래에 한국과 일본이 미국을 중심으로 한 삼각협력 체제를 구축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런 이유로 본 연구는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이라는 두 동맹이 병렬적으로 연대하는 형태의 협력을 대안적 모델로 제시하였다. 과거 한미동맹이 국제정치 구조와 위계질서에 따라 한미일 삼국협력의 하부구조로 인식되었다면, 최근의 한미동맹은 미일동맹과 대등한 수준의 전략 동맹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히, 미중 간 갈등적 경쟁의 심화에 따라 한국은 미국에 있어 아시아의 중요한 파트너 국가임에 분명하다. 따라서 한일 간 역사 갈등을 미봉책 수준으로 봉합하고 무리하게 삼각협력 체제를 구축할 것이 아니라, 두 동맹이 병렬적으로 연대 및 협력하는 형태로 아시아 전략을 추진할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한국과 일본이 과거사 문제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양국은 현재처럼 과거사 문제를 입구에 두어 다른 문제에 대한 논의나 협력을 원천 배제하는 형태에서 벗어나 역사 갈등 해결 노력과 전략적 협력·정책 공조를 병행하는 외교적 태도를 보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결국 한일 협력과 한미일 삼각협력으로 인해 얻게 될 이익은 미국만의 것이 아닌, 아시아 지역의 안정적 평화와 번영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국문 자료

- 김기정. 2021. 『2021년 한미 정상회담과 한국 외교의 비전』. 서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 김도희. 2021. “한미 외교·국방장관(2+2) 회의의 주요 내용과 쟁점 및 과제.” 『NARS 현안분석』191. 국회입법조사처.
- _____, 박명희, 정민정. 2021. “바이든 시기 미일 관계 주요 현안과 시사점.” 『NARS 현안분석』199. 국회입법조사처.
- 박선원. 2001. “냉전기 한미일관계에 대한 체계이론적 분석.” 『한국정치외교사논총』23(1).
- 박철희 외. 2016.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도입과 한반도』. 서울: 서울대출판문화원.
- _____. 2019. “한일 갈등의 심화와 한일안보협력의 미래.” 『한국국가전략』10.
- 신육희. 2019. “‘한국조항’의 문제: 한미일 관계 속의 한일관계.” 『한국과 국제정치』35(3).
- 우승지. 2003. “냉전 시기 한국-일본 협력의 퍼즐.” 『한국정치학회보』37(3).
- 조진구. 2021.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의 평가와 과제.” 『IFES 브리프』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 천자현. 2016. “국제 정치에서 갈등 관리(conflict management) 연구: 한반도 문제에의 적용 가능성과 한계.” 『아세아연구』59(4).
- 허종준. 2013.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과 한국의 대응 방향.” 『GRI 퍼스펙티브』(10월 23일).

영문 자료

- Cha, Victor D. 1999. *Alliance Despite Antagonism: The United States-Korea-Japan Security Triangle*. Stanford, California: Stanford University Press.
- _____. 2000. "Abandonment, Entrapment, and Neoclassical Realism in East Asia."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44(2), 261-291.
- Chun, Jahyun. 2021. "Who decides foreign policy? The role of national trauma in shaping the influence of public opinion in South Korea."

- Policy Studies* (Online First). <https://www.tandfonline.com/doi/abs/10.1080/01442872.2021.1895980> (검색일: 2021년 10월 12일).
- CRS. 2020. "Japanese Prime Minister Abe's Resignation and the U.S.-Japan Alliance." *In Focus*, September 24. <https://sgp.fas.org/crs/row/IF11644.pdf>
- Department of State. 2021. "Reaffirming the Unbreakable U.S.-Japan Alliance." *Fact Sheet*, March 14.
- _____. 2021. "U.S.-Japan Joint Press Statement." *Media Note*, March 14.
- Duncan Bell ed.. 2006. *Memory, Trauma and World Politics: Reflection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ast and Present*. New York: Palgrave.
- Edkins, Jenny. 2002. "Forget Trauma? Responses to September 11." *International Relations* 16(2).
- Erica, Resende and Dovile, Budryte eds.. 2013. *Memory and Trauma in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ies, Cases and Debates*. London: Routledge.
- Lee, Michelle Ye Hee. 2021. "As Biden Seeks to restore alliances, a souring Japan-South Korea relationship presents a challenge." *Washington Post*. March 2.
- Snyder, Glenn H. 1997. *Alliance Politics*. Ithaca and London: Cornell University Press.

기타 자료

- 김민수, 조승한. 2021. "미 주도 유인 달탐사 '아르테미스' 참여 굳힌 한국... '신 우주 질서 한복판으로.'" 『동아사이언스』 (5월 31일). <https://www.dongascience.com/news.php?idx=46877> (검색일: 2021년 10월 1일)
- 한국갤럽, 테일리 오피니언. 2016. 제236호. 11월 셋째 주 한일군사협력관련 조사.
- "Addressing RCEP, Biden says U.S. should ensure it sets trade rules." *Inside U.S. Trade*, 16 November 2020. <https://insidetrad.com/daily-news/addressing-rcep-biden-says-us-should-ensure-it-sets-trade-rules> (검색일: 2021년 8월 27일)
- "한국일보-요미우리신문 2017년 한일 국민의식 공동여론조사." 『한국일보』 2017/06/12.

202 ■ 『東西研究』 제33권 4호 (2021)

外務省. 2020.『外交青書』

日本經濟新聞. 2021.5.20

Abstract

**Changes in the South Korea-
U.S.-Japan Trilateral Cooperation:
A Focus on the National Trauma and
Institutionalization of Cooperation**

Jahyun Chun ■ Yonsei University

The new Biden administration of the United States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the trilateral cooperation between South Korea, the U.S., and Japan as a diplomatic strategy to try to restore its position as a responsible hegemony in the strategic competition between the U.S. and China. Especially given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South Korea and Japan has deteriorated in recent years, it has emerged as a major foreign policy priority for the new U.S. administration to improve South Korea-Japan relations so that it can establish a smooth tripartite cooperative relationship in East Asia. This study analyzes the changes in the trilateral cooperation between South Korea, the U.S., and Japan from the perspective that the Korea-U.S. alliance has developed spatially and qualitatively and has independently become an important bilateral alliance, rather than operating as a substructure of the Korea-U.S.-Japan cooperation. The most fundamental reason for the difficulty in institutionalizing the trilateral cooperation is the past history issues between Korea and Japan. By analyzing the impact, a nation's collective memory has on foreign policy and the limits of U.S. involvement, this study proves why these issues are currently still ongoing. By examining the reasons, the trilateral cooperation is difficult to be institutionalized in a short period of time, this study proposes a parallel cooperation model as an alternative.

Key Words: trilateral cooperation, bilateral alliance, Korea-Japan historical disputes,
national trauma, third-party mediation